광주 등하굣길 어린이 보호 강화 '헛구호'

지난해 대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1만5천건 늘어
운전자 인식 제고 시급…"지도·단속 강화·시선유도봉 설치"

29일 오전 북구 오치동 서산초등학교 후문 어린이 보호구역 이면도로는 양쪽으로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즐비해 있다. /주성학 수습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끊이질 않으면서 등하굣길 어린이 보호 강화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3배 늘어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광주에서는 오히려 과태료 부과건수가 1만건 이상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오전 9시께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어린이집 주변.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돼 있지만 도로 양옆은 각종 차량이 즐비했다.

특히 이곳은 내리막길 골목이 맞물려 있음에도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통로는 비좁았고 도보에는 사각지대가 형성됐다.

부모들은 불안한 표정을 숨기지 못한 채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차들이 지나다니는 길로 등교를 하는 모습이었다.

인근의 서산초등학교 후문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곳 또한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등굣길에 오른 어린이들은 삼삼오오 뭉쳐 걸어가다, 차가 다가올 땐 잠시 한쪽으로 흩어지며 학교로 걸어갔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구 서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사거리에 설치된 'CCTV로 감시 중'이란 형광판이 무색할 정도였다.

주변의 다른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글자가 지워져 보이지도 않았다.

어린이집 실장 황모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금지 시간에 주차하는 차들이 있다"며 "기존의 넓었던 어린이 보호구역도 민원으로 인해 줄였고, 골목길이라 인도도 없는 상황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이마저도 들어주고 있지 않다"라고 걱정을 이야기했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최모 씨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 정문은 그나마 차량을 볼 수 없는데 후문 같은 경우 주차된 차량이 즐비해 있다"며 "오죽하면 애들이 그런 상황에 익숙한지 자연스럽게 지나다니는 차량을 피해 집에 오는 것도 봤다"고 위험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같은 모습은 광주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실제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건은 2020년 2만7천604건에서 2021년 3만1천90건으로 3천여건 이상 늘었다. 도로교통법이 강화된 올해(1-11월)에는 4만6천256건의 불법 주정차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1만5천여건이 증가한 수치다.

관련 법안 강화에 맞춰 지자체의 단속은 강화됐지만, 이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을 제자리에 머물면서 도로교통법 시행 1년에 대한 체감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강화와 시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일부 운전자들이 제기하는 주차공간 협소 문제는 공용주차장 조성 등 관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해도 그 옆에 주차를 하는 사례도 많다"며 "우선 지도·단속을 지속하고 개선이 안될 경우 시선유도봉 추가 설치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성학 수습기자

조선대 총학생회 선거 세칙 위반 의혹

투표율 기준 미달 불구 개표 강행…학과·단과대학 불공정 논란도

조선대학교 선거관리위원회가 2023학년도 총학생회 선거에서 세칙 위반과 함께 불공정하게 개표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조선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2023학년도 대학 총학생회 선거가 진행됐지만 선거 첫 날 투표율 50%를 넘기지 못해 이달 28일까지 연장투표를 실시했다.

조선대 총학생회 선거 시행 세칙 60조 1항 상 개표는 전체 유권자 중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면 가능하다.

다만 투표 시작일에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하면 연장투표로 넘어간다. 연장투표는 전체 투표율 가집계가 55%이상이 될 때까지 무기한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세칙에도 불구하고 조선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투표율이 50.21%에 그쳤음에도 개표를 실시, 당선 공고를 냈다.

이를 두고 조선대 학생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세칙까지 위반하면서 개표를 감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의혹을 대학 익명 게시판 등에 우후죽순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연장을 끝내고자 무리하게 개표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더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세칙대로 투표율을 55%까지 채웠으면 당선자가 바뀔 수 있었던 것도 문제가 되는 대목이다.

투표 결과 당선자와 낙선자의 차이는 불과 465표다. 만일 830명이 추가 투표해 투표율 55%를 채웠고, 이들이 한 후보에게 쏠렸다면 당선자와 낙선자는 바뀌게 될 수 있다.

단과 대학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총학생회 개표와 달리 연장투표로 넘어간 일반 학과와 단과대학은 투표율 55%를 넘긴 뒤 개표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조선대 2023학년도 총학생회 선거를 두고 세칙 위반과 불공정 논란 등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학생들 상당수가 이번 선거를 무효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하고 있다.

한 학생은 "장기간 이어지는 선거를 끝내기 위해 세칙을 위반하면서까지 개표를 진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작태에 같은 학우인게 너무 부끄럽다"며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조선대학교 총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투표해달라'는 독려 문자 전, 진정 학우들을 위해 총학생회가 무엇을 해왔는지 스스로 되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선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55%로 명시된 가집계는 현장투표 당시 오차율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라며 "온라인 투표는 정확하게 투표자 수가 확인이 돼서 50%가 넘어도 개표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현 총학생회의 임기가 끝나가고 새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각종 회의나 의결에 총학생회가 필요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안재영기자

과천 제2경인고속도 방음터널 화재…5명 사망·37명 부상

버스-트럭 추돌로 발생한 불 터널로 확산…2시간 만에 완진

29일 오후 1시49분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이날 불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와 트럭 간 추돌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럭에서 발생한 불이 방음터널로 옮겨붙으면서 순식간에 확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자 5명은 사고 차량 등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친 37명 중 3명은 중상이다. 안면부 화상 등의 부상을 당했다. 34명은 연기 흡입 등의 경상이다. 경상자 중 다수는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고 현장 처치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구간 내에 고립됐던 차량은 총 4대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향후 인명수색 결과에 따라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94대와 소방관 등 인력 219명, 그리고 소방헬기를 동원해 오후 3시 18분 큰 불길을 잡고 불이 난 지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12분 완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향후 현장 합동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여수 공업사서 40대 흉기 난동…2명 사상

여수의 한 공업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께 여수시 주삼동 한 공업사에서 50대 2명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이들은 이 공업사 직원들로 동료인 A(47)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있던 다른 동료들이 A씨를 제압하고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옮겼다.

피해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명은 숨졌고 1명은 중태에 빠졌다.

목격자들은 "점심시간을 마치고 피해자들이 공업사에서 쉬고 있는데, A씨가 들어오더니 사무실에 있던 흉기를 갑자기 휘둘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김진선기자

여성 폭행 핸드백 뺏은 50대 징역 5년

길거리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핸드백을 빼앗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5시40분께 광주 서구 유스퀘어광천터미널 앞 흡연구역에서 행인인 B(57·여)씨를 무차별로 폭행하고 현금, 신용카드, 신분증, 휴대폰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복기자